

# 2023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9/3	[뉴스현장] 북한, 정찰위성 2차 발사도 실패..."3단계 비행 중 오류" [뉴스리뷰] 잇단 흉악범죄에 '의경 제도입' 등 범정부 대책	
김홍태	9/10	[일요와이드]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대규모 집회...추모 열기 고조 [뉴스오늘] 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안전교육 시급"	
안지연	9/17	[뉴스현장]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려...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뉴스13] 대기업 64%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 없거나 계획 미정"	
임운주	9/24	[출발600] '접근금지'만으로는 역부족..."적극적 분리 필요" [뉴스 오늘] 잇따른 강력범죄...사형제 논란 재점화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운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9/3(일)	박세진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보도인데요.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상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의 홍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번 보도에서 국방부, 대한광복회, 대통령실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는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또 다른 홍상 이전 문제, 박근혜 정부시절 명명된 해군의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개정 문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문제 등과 연계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논의들을 망라한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하는 군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합뉴스TV의 평가도 함께 다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 관련 단체의 입장을 보도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러 공방이 진행되던 와중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유념해 보도하겠습니다.
2023 9/10(일)	김홍태	지난 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금융이 점차 디지털화하면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은행일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어, 은행 영업점과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금 사용 빈도가 줄고 있는 탓인데요,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은 16,400개로, 반년 만에 400개 이상, 즉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무려 4,500개가 줄었다는데요, ATM은 은행에겐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이고, 지난해 금융 업무에서	최근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연속 보도해왔습니다. 금융권의 '큰 글씨 ATM', '장애인 수화 상담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으며 뒤이어 'ATM 소멸'과 관련한 리포트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앞

		ATM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으로도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하지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시대에 겪는 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은행들 제를 보다 다각화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언급한 '모바일 banking' 등 비대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 현장감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9/17(일)	안지연	매년 9월이면 취업 지원자들은 기업 공채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올 하반기 취업 문은 예년보다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뉴스에 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8.0%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6.6%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 대응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의 보도자료를 정리한 경제 단신이라 채용 트렌드를 설명할 만큼 보도 분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은 평가원께서 언급한 '과거 채용 규모 등에 대한 내용' 등은 담겨있지 않았으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채용 관련 리포트에 있어서는 다양한 트렌드와 더불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위한 긴축 경영 돌입이라고 답한 비율은 25.3%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해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9월은 공채 시즌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9월이면 쏟아지는 신규 채용 정보 수집과 지원에 바쁜 날을 보내는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좋지 않은 경제 환경이 꼽혔습니다. 취업률과 취업자 수가 뉴스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만큼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 보도는 단신으로만 다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과거의 채용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보도에 포함이 되었다면 현재 채용 규모의 감소를 파악하는데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환경이나 기업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봤다면 이전과는 다른 채용 규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채보다는 수시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이른바 중고신입을 채용하는 것도 신규 채용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보도가 어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3 9/24(일)	임윤주	11일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형제를 곧장 부활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미 국회에서도,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9건 발의되는 등 오랫동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인권 존엄, 그리고 교정 가능성 등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현재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여론, 해외 국가	매주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발제해 심층 취재하는 프리즘 아이템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시 흥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거셌고 법정 최고형 글로컬뉴스부, 정치부 3개 부서가 아래 내용을 주제로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①잇따른 강력범죄...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 ② EU "사형제, 절대 거부"...미일 "흉악범죄 억제" ③정부, 형법 개정 시사...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될까 /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 논란은 가석방 없는 종신

		현황에 이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까지, 시청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구성하여 전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어지는 보도라고 보았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쟁점을 앞서 언급하였던 사형제도 쟁점과 연결 지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운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맞물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가석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정리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 쟁점과 맞닿아 있고, 정부도 그런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찬반양론이 있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다만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는 정치인들의 싱크를 통해 처리했는데 가석방의 효용성 내지 한계를 조금 더 분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인 지난달 30일 사 회부에서 /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이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법 운용의 중요성과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관련 이슈는 계속 추적 보도할 계획입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09.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1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8월 24일 새벽,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5월 31일,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2시간 30분이 지난, 24일 오전 6시 15분,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우리 군은 서해상에 떨어진 로켓 낙하물을 찾는 작전을 수행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한 주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뉴스현장>, <뉴스프라임>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사 당일 오후 <뉴스현장>에서는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함께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 센터장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위성이 3단계 비행 중 폭발이 발생한 것에 비춰볼 때, 2단계 비행 중 실패한 지난 1차 발사에 비해 비행 기술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이번 발사를 위해 야간에 준비과정을 거치고, 새벽시간에 발사를 감행한 것은 발사 준비과정을

숨기고, 기술 수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 달 여의 기간 내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실패에서 도출된 기술적 문제점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있게 추가 발사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저녁 방송된 <뉴스프라임>에서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초청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발사 전 일본측에 8월 24일에서 31일 사이를 발사 기간으로 통보했는데 해당 기간의 첫날인 24일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음이 조급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1차 실패 후 단기간 내에 발사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찰 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실패는 북한 ICBM의 타격 정확성과 관련한 기술이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25일 <1번지 이슈>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발사와 최근 북중일의 외교 정책을 연계해 분석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이 주목한 것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당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의 담화였는데, 강 국방상은 한국, 미국,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반러시아, 반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한다며, 이러한 흉책에 대항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우방국과의 전투적 우의와 단결을 백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담화에 중국·러시아와의 군사 외교 분야 협력을 긴밀히 지속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연합뉴스 TV는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각도에서 이슈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1차 발사 때의 보도와 비교해 보다 심층적으로 해당 이슈를 다룬 것인데,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발사를 서두른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의 외교안보정책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분석의 경우 사실 또는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전문가의 생각이나 추측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는데, 시청자와 국민들은 전문가의 견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도에서는 안보 이슈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가운데 사실과 주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북한은 3단계 비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2단계 비행에서부터 비정상 비행이 식별되었다고 발표 했는데 이는 북한의 발사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면 사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3일, 정부가 국무총리 특별 담화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하고, 경찰력 거점 배치 및 순찰 강화,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치안 역량 보강을 위한 경찰조직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4월을 끝으로 해체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화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천 5백명에서 8천명 정도의 의경 소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데, 대략 7개월~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의경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및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총리실은 다음 날인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에도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경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25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의경제도 재도입은 유관기관 간 논의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의경제도 재도입 논의는 정부 내 소통 부재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제인 정부 시절 의경제도 폐지 결정 당시 첫 번째 이유로 꼽힌 것이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군 병력 부족 때문이었음에 비춰볼 때 이번 발표 전,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는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의경제도 재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방부가 쉽게 동의할 사항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의경제도 재도입 논의는 정부 내부에서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보도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비판 및 감시 기능 입에 비춰볼 때 보다 강한 어조로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복무기간 감축, 병 봉급 인상 등으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의 현실을 함께 다루며, 의경제도 재도입 정책이 야기할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흥범도 장군 관련 보도인데요.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해 흥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이유로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이력 등의 논란이 있는 분을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흥범도 장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광복회가 성명을 내고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와 다를바 없다”고 비판하자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후 군 당국은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 장군의 흉상만 옮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번 보도에서 국방부, 대한광복회, 대통령실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는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또 다른 흉상 이전 문제, 박근혜 정부시절 명명된 해군의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개정 문제, 광주광역시 추진중인 작곡가 정윤성 역사공원 사업 문제 등과 연계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논의들을 망라한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하는 군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합뉴스TV의 평가도 함께 다루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9.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1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스킨존과 횡단보도에서 누워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소위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며,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기까지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등에게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3일 일요일아이드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집회는 고인이 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는데, 주최 측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집회는 고인이 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있었고, 교사들의 잇단 사망으로 인해 집회는 열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교육부의 단체 행동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방침에 대해 교사들은 불만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 추모와 분노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교사의 고요한 절규 속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는 그대들이 함께 짊어질 때라는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알려져 있으며, 서이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30여개의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일 뉴스와이드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국과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이초 교사는 생전에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사회와 교육 현장에 큰 위기이지만,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 기록에 남기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고시가 확정되고, 지난 1일 부터 일부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하이톡'에서도 학부모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교사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메시지 수신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국과 관련 업체들이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뉴스04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하고 악성민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 시도교육감은 지난 1일 오전 4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여·야·정은 악성민원이 반복될 경우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은 교육계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교사 한 명의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회가 열렸던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은, 교육부는 교권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게 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육 기관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시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정책, 그리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육 현장의 강화된 대응이 도입된 점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도구인 '하이톡'에서의 차단 기능 추가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추진은 교사들의 권리와 직업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건강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육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단기적으로 보이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그러가야 할 교육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을 멘트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교육공동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학부모로서 이 현장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일 뉴스오늘에서는 최근 스킨존과 횡단보도에서 누워 있는 청소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비판이 있

며, 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두 사람이 누워있고, 다른 도로에서는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10대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식이법'을 악용한 놀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에 따른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는데요, 중랑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누워있으며 차가 계속 붙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후에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청소년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소위 '민식이법 놀이' 보도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현행 도로 교통법이 이런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 점입니다. 다만 보도에서 더 나아가 어떤 교육형태와 방안이 현재까지 시도 되어 왔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서는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 여기서는 교육 부족 등을 집고 이에대한 개선안을 다루면 내용이 풍부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교통안전 교육사례, 혹은 우리나라의 각 도나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등의 소개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금융이 점차 디지털화하면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은행일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어, 은행 영업점과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기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금 사용 빈도가 줄고 있는 탓인데요,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은 16,400개로, 반년 만에 400개 이상, 즉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무려 4,500개가 줄었다는데요, ATM은 은행에겐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이고, 지난해 금융 업무에서 ATM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은행들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영업점을 개설하거나, 제휴 등을 통해 ATM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 사용의 감소로 인한 ATM의 소멸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많은 편의성을 가져왔지만,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금융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ATM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상당한 불편

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클 텐데요, 은행이 어떻게 이를 대응 하고 있는 지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면, 보도의 내용이 더 충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 앱에 '고령자 모드'를 추가하여 더 큰 글씨와 간단한 메뉴로 개선하는 방법 등도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 내용을 검토하여 보도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9. 1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1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교권을 침해 받는 사례들이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11일 뉴스현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과 관련 법적,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학교사노조에 본인의 사례를 담은 교권침해 사례를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지적되었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악성민원으로 파악되었습니. 한편, A 교사가 직접 제보한 내용을 보면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이 문제는 위원회 제도의 유명무실함과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학부모의 극심한 민원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죄 등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동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 개인이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집단적, 체계적으로 이런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학교 안, 교육청 안에도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두드러지기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다보니 정상적 범주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해당 조항 일부수정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담에서는 도움을 받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학교의 분위기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우리 사회에 놓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현재 교권보호와 관련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점이 인상깊었는데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의 행위 또는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다보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설명을 통해 해당 조항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9월이면 취업 지원자들은 기업 공채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올 하반기 취업 문은 예년보다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8.0%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6.6%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 돌입이라고 답한 비율은 25.3%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9월은 공채 시즌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9월이면 쏟아지는 신규 채용 정보 수집과 지원에 바쁜 날을 보내는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좋지 않은 경제 환경이 꼽혔습니다. 취업률과 취업자 수가 뉴스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만큼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 보도는 단신으로만 다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과거의 채용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보도에 포함이 되었다면 현재 채용 규모의 감소를 파악하는데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환경이나 기업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봤다면 이전과는 다른 채용 규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채보다는 수시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이른바 중고신입을 채용하는 것도 신규 채용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보도가 어이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보행약자를 떠올리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 외에 다른 계층의 보호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난 9일 생생네트위크에서는 보행약자 보호 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처럼 환자와 장애인 등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해 병원을 찾는 보행약자를 위한 호스피털존에 주목했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에이치존(H-ZONE)을 지정했다고 전하면서 300명 이상 대형병원 반경 500m 범위에 조성되는 보행안심구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이치존은 최적의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며 지속적 확산을 언급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전과 도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새로운 변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에이치존의 공공디자인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쿨존과 슬로우존 등 어린이 보호를 대상으로 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행환경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바퀴가턱에 걸려 자력으로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는 장면을 통해 보행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이라는 한 지역의 사례를 전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보행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치존 지정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들의 입장만을 전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행 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치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이 강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 영토 등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 등 내년 예산안에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며,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도쿄에 있는 전시시설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영토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해당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영토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독도 수호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도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9.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올부즈맨 61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해당 지역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토킹의 위협성과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한 것인데요. 연합뉴스TV에서도 현재 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해 짚었습니다. 14일 <출발600>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 7월 스토킹 범죄 후 살해한 가해자가 잠정조치 2, 3호 명령을 받았다는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연락 금지 명령입니다. 기자는, 가해자에게 구금이 이뤄지는 잠정조치 4호는 내려지지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4호 잠정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률은 52%로 저조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스토킹 피해자 절반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송치된 비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본질적인 분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도의 주요 계기가 된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자극적이거나 흥미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해 집중하여 시의성을 갖춘 좋은 문제 제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첫 부분에 언급한 사례도 가장 최신의 사건을 활용하여, 해당 사례 언급만으로도 현재까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나 그 처벌 수준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무거운 형벌, 처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 논의의 역사, 대체 형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11일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있었던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부합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는 사형제 관련 찬반 의견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전달했는데, 우선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인명 경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오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여론을 살펴보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는데요,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4.3%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합헌성을 두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판단을 내려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주목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 두 번의 헌법소원 등 그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을 짚어주었습니다. 보도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듯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심리 과정과 결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덧붙여주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부분을 인용할 때 등장한 곳이 국제 앰네스티인데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단체이긴 하나, 단체명을 언급할 때는 간단한 요약과 덧붙이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라고 설명한다면, 뉴스 시청자들의 이해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을 살펴보는 보도인데요, 11일 <뉴스 20>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2곳으로, 10년 만에 14곳이 늘었고,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일찍이 사형제를 폐지한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입니다. 기본권 헌장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EU 가입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흉악 범죄 등에 대한 사형제의 예방 효과를 확신하는 국가들로 꼽힙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생각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본 보도에서 드러난 사형제도 존폐 여부의 주요 쟁점은 흉악 범죄 예방과 생명권 존중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형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치를 보여줌에 있어 적절한 그래프 활용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사형제도 유지국을 보여준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는 단순한 수치와 간단한 그래프로 제시된 내용을 세계 지도를 이용하여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체 형벌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세웠는데요, 11일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형제를 곧장 부활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미 국회에서도,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9건 발의되는 등 오랫동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인권 존엄, 그리고 교정 가능성 등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현재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여론, 해외 국가 현황에 이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까지, 시청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구성하여 전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어지는 보도라고 보았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쟁점을 앞서 언급하였던 사형제도 쟁점과 연결 지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운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맞물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가석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정리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의 노력 끝에 고대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내용 전달한 18일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세계유산 등재 확정 의미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강동진 교수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 시대에 존재했으며 철기 문화를 전파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가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10년 뒤 인정받게 된 가야 고분군은, 가야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7개의 연맹체 왕의 무덤군으로 연속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10가지 등재 기준 가운데,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로 인정받아 등재되었습니다. 한정된 대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는 일반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중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질문하여 흥미를 유발하였고, 전문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본 보도만으로도 간략하게나마 가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야 고분군은 어떤 것을 뜻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전달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3년 9월 3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9월 10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9월 17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9월 24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